

월/요/광/장

김유선



매화축제에 '구구소환도'라는 놀이가 등장했다. 동지가 되면 매화 등결에 81송이의 하얀 매화를 그려놓고, 매일 한 봉오리씩 붉은 칠을 하며 봄이 오기를 기다린 옛 선비들의 문화 컨셉에서 가져온 것이다. 9일째마다 조금씩 따뜻해져 81송이를 다 칠하면 장박 설중매가 피는 봄을 맞게 된다. 추위를 이겨내는 희망으로 매화도가 등장한 것이다.

고 했고, 솔솔이 드나드는 바람은 '풍입삼'이라고 했다. 암향을 맡고 솔잎 바람소리를 들으려면 집중력도 필요하겠거니와 명상훈련도 되었겠다. 소나무와 매화의 품격도 자연스레 깨우치게 될 것이다. 솔바람이 아름다운 일이나

총선 출마자들의 난장과 봄

램 소리를 들었으나, 매화향이 어퍼하다나, 그야말로 자연생태 명상의 아동 교육 법이었다.

조선시대 의적이라는 일지매는 도둑질 한 집 담벼락에 매화 가지를 그려 자신의 행적임을 밝혔다. 의롭지 않은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선비들이 매화를 사랑한 것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눈 속에서 꽃피우는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절망과 고통을 견디는 상징으로 매화는 선비들의 품격에도 걸맞는다. 눈 속에서 피어나는 기개와 정조가

군자의 이상과 닮아 선비들은 시로, 묵화로 매화를 더듬었다.

얼마나 장한 일이나/ 꽃과 잎 꺾이면 뿌리를 그만쯤 깊이 박고/ 가지째 잘리면 아예/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흙과 풀을 비집고/ 더 멀리 더 깊이 뿌리 뻗는 일이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나

신경림 시인은 진달래꽃을 강한 생명력의 아름다움으로 노래한다. 꺾이고 잘려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저 자연의 위대한 힘이며, 절망에서 일어서는 눈물겨움이 아름다운 것이다. 치

장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성형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가 아름다운 것이다. 겨울을 뚫고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는 새싹의 기개가 아름다운 것이고, 칙칙한 황무지에서 꽃으로 피어나는 정절이 아름다운 것이다.

경계가 불안하고 정치는 어수선할 뿐이며 공해는 점점 도시를 더 황폐하게 만드는 데도 도시에 봄이 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시멘트 담벼락 위로 비죽 얼굴을 내밀고 골목을 환히 밝히는 우주의 꽃등 같은 저 봄꽃들.

T.S. 엘리엇의 잔인한 봄이여.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추억과 욕망을 뒤섞어/ 라일락꽃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은 과거와 미래시간의 응화다. 미래에 대한 욕망만으로는 꽃을 피울 수 없다. 노력의 축적이 가미되어야 꽃이 된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침묵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과거와 미래의 접점이 꽃이다.

노력 없이 경제를 꿈꾸고 사람을 꿈꾸는 절도범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시끄러운 요즈음이다. 노력 없는 사람은 쉽게 끝나고, 노력 없는 일확천금은 봄눈처럼 허망하게 녹아 사라지고 법, 서로 예극자라고 싸우는 소리가 시끄러워 사람들은 귀를 막고 정치광장을 떠나 매화밭으로 간다. 권력의 맹종과 황포의 사상누각이여, 우리 마음에 아직도 잔설이 질척이는 것을 저들은 보지 못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나.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해주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는데 총선 여파의 봄은 어수선하다. 감독인 국민은 조용한 배우인 출마자들의 난장이 시끄러운 잔인한 달 4월도 문턱이다.

(사)여성문제연구회 회장·정안대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책없는 총선 부실선거 우려된다

4·9총선이 불과 1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약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권자가 인물도 정책도 점검할 시간이 없다. 이번 선거가 정당만 보고 표를 찍는 '묻지마 투표'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총선을 맞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광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20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100여명의 후보자 가운데 정책공약을 발표하거나 메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표방한 후보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지역구에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들도 많다. 소속 정당과 이름, 그리고 경력만으로 표심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책 없는 선거에 대한 책임은 각 정당에 있다. 후보자들도 공천에만 매달려다 보니 공약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특히 막판까지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지역연고도 없는 인사를 공천하는가

하면 아직도 공천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약 발표는 업무도 못 내고 있다. 정당이 후보자를 찍어내려 보내면 유권자는 표나 찍으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무원칙 공천과 능력 공천 등으로 정책 선거가 실효되고 있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오만한 태도다. 이 같은 오만한 태도는 자칫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

정책과 검증이 사라진 선거는 부실·납탈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선거는 정책 품질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권자들까지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성향이라도 꼼꼼하게 따져 투표에 나서야 한다.

유권자는 안중에 없이 능력공천 등으로 이번 선거를 부실선거로 몰고 가는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하계 U대회 광주 실사 철저히 준비해야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계 U대회) 개최 후보지 실사 일정이 확정됐다.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은 5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대회시설과 유치 열기 등을 점검한다. 광주 실사는 하계 U대회 유치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현지 실사는 매우 중요하다. 스웨덴 FISU 집행위원인 스테판 버그 단장을 비롯 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광주의 도시환경과 체육시설 등 종합적 개최능력을 평가해 FISU에 보고하게 된다. 개최지는 5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 총회에서 집행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경쟁상대인 스페인 비고는 5월 8~11일, 러시아 카잔은 5월 15~18일 실사를 받는다. 광주시가 가장 먼저 실사를 받게 돼 부담스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유치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U대회 유치에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

면서 탄력이 불고 있다. 강력한 라이벌은 세 번째 도전하는 카잔이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당선자가 직접 유치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상황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광주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와 세계여성포럼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도시 여건과 교통 접근성, 스포츠 인프라, 시민 유치 열기 등 제반 여건도 경쟁도시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하계 U대회는 새 정부 들어 첫 국제체육대회 유치전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광주시는 대대적 환영행사와 문화·예술도시의 면모를 부각해 실사단을 감동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유치지원단 구성과 사절단 파견 등 법적·재정 지원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미진



올해 2월21일 판사로 임명받아 광주 지방법원에 온 이 이제 막 한 달이 지났다.

그토록 원하던 판사가 되었고, 법조 경력 한 달의 새내기 판사로서 광주일보 법조 칼럼에 글을 쓰는 기회까지 얻었으니 올해 내 운이 좋은 것 같다.

올해 사법연수원 연수를 마치고 광주 지방법원에 임용되는 판사 5명 모두가 여성인 것이 화제가 되었다.

여성 판사가 전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관심이라 생각한다.

사실 평생 동안 법원에 한 번 올일 없이 사는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인 것은 분명하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판단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려보이고, 경험도 부족한 여성 판사가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나는 그러한 걱정들이 기우(杞憂)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판사가 되고 싶다.

내가 아는 내 또래의 여성 판사들도

새내기 판사의 다짐

신임 여성판사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

다. 화제의 주인공 중 한 사람으로서 나는 더욱 잘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법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통 진단서의 글자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챙겨 먹는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환자가 알 수가 없다.

어디가 아픈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의사의 말 뿐이다. 그래서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다.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처럼 저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오게 된다.

역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마다 성별이나 주관적인 생각에 좌우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돌아본다.

어려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웃을 입을까 고민하기도 한다. 분명 나는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여성이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배울 것도 많은 초보 판사다.

그러나 법정에서만큼은 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는 판사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이다 다짐한다.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성판사들에 대한 우려가 아닌 기대만큼 받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광주지방법원 판사>

자동차 보험 가입거부 횡포... 근절 대책을

사고 경력이나 거주지역,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지역 거주자에 따라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단지 사고가 많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하다. 교통사고는 도로 등의 인프라와 안전 시설 확보와 함께 운전자 각각의 법규준수 등 안전운전 실천에 달려있다. 지역의 사고율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에 다름 아니다.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은 지역차 차별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싸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평소 적잖은 비용을 들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처럼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홀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또 경찰에 대한 가입제한도 소형차를 권장하는 정부시책과도 어긋난다.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한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공동물건'에 가입,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동물건'이란 손해 보험사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해당 차의 사고 때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고객은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10~15% 더 내야 하는 제도다.

이 같은 손해보험사들의 횡포는 가뜰이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 금감원이 손해보험사의 가입거부가 적법 되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철저히 지켜져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길 바란다. <최주영·광주시 남구 월산2동

기고

임명옥



세계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시대라는 큰 물줄기를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발맞춰 세계적인 일류국가, 자치단체, 도시향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 지역으로 특성화 분권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로부터 영암은 고대 해양의 실크로드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 문화를 전파하고 흡수하여 진취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토대였으며 해양문화의 주역이었다.

'영암항' 분리는 글로벌시대 큰 물줄기

현대에 이르러 영산강지구 농업종합 개발계획 2단계 사업으로 1981년 영산강하구언이 완공되면서 영암은 해양문화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갯벌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었다.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이 조성되고 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해소하기 위해 대불 전용부두가 축조되는 등 삼호읍 관내 6개 부두가 들어선 것이

다. 그러나 영암항에 있는 6개 부두를 목포항이라 부르고 있으며 군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지 사람들이 취업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현실의 자괴감과 비통함을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고 이에 영암군 사회단체에서는 지난 1월 10일 영암의 자존심과 주권

을 되찾고자 '영암항 분리 주권 찾기 추진위원회'를 출범 시켰다.

그동안 영암항 분리 주권찾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영암항 분리지정 건의서를 채택하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하였으며 사회단체에서는 플래카드 걸기와 군민서명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해 나가고 있어 영암항 분리지정 운동은 점점 군민의 열기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명백히 영암항에 존재하고 있는 6개 부두를 목포

항 내에서 분리하여 영암항으로 되찾는 일이다. 이러한 영암군민의 당연한 주장과 열원을 소지역주의 발상이다 라고 보지 말고 지역의 주권과 자치권을 상실한 지역주민의 절체절명의 몸짓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땅에 있는 6개 부두를 영암항으로 되찾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무요, 후손에게 잘 가꾸어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자산으로 양보해서 될 일이고 목숨을 내주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암항' 지정은 우리 7만 군민 모두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기에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분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영암항 분리 주권찾기 추진위원장>

뉴시터 환경오염 심각... 뉴시터관리제 도입 서둘러야

주말이나 휴일 뉴시터에는 무법 천지다. 술병, 음식 찌꺼기, 미개, 납땀이 추, 영진 뉴시터 등 쓰레기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뉴시터인들의 자연보호 정신 실종이 안타깝기만 하다. 더군다나 물에 빠뜨린 납 추는 수은이나 카드뮴 등과 더불어 매우 해로운 중금속이다. 또 썩은 물고기는 악취를 풍기며 강산을 오염시킨다. 휴식으로 뉴시터를 즐기던 사람들의 뒷처리해 결국 귀중한 세균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장기간 방치된 채 명산 대전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실업자가 늘고 이들이 뉴시터를 자주 찾는다. 물고기를 낚는 것인지 세월을 낚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뉴시터를 드리우고 앉아 시간을 보내며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줘야 되겠는가.

뉴시터인이 늘어나면서 뉴시터의 환경은 오염이 극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신속히 뉴시터관리제를 도입하여 뉴시터인들을 교육시키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하천 정화활동을 벌여야 한다. 뉴시터인들 스스로가 공동도덕을 지키지 않는 결과이다.

우리 금수산강이 아름답게 보전돼 후손들에게 천혜의 자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뉴시터를 낚 추 사용을 금하고 대신 돌이나 기타 자연에 해가 없는 재질의 추를 의무 사용케 하는 등 제도 정비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면적은 남한의 절반, 인구는 100만명에 전구를 통틀어 백화점은 2개, 공장은 3개 뿐이다. TV는 1999년, 인터넷은 2000년에야 들어왔다. 경제체제는 가족의 농경지와 목축활동을 통해 거의 모든 생필품을 자급하는 특이한 형태다. 1인당 국민소득 1천400달러, 최약은 아니지만 가난한 것만은 분명하다. 히말라야 산맥 속 '은둔의 왕국' 부탄에 대한

간략한 소개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볼 일은 아니다. 우선 이 나라에서는 사냥과 어로를 절대 할 수 없다. 벌목행위도 금지다. 전국은 금연 구역이다. 연간 관광객은 6천명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모두 환경보호를 위해

102위였다. 부탄이 '마음이 행복한 나라'가 된 데는 지도자의 탁견이 있었다. 부탄 국왕 지고게 싱에 왕추크는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을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GNH에는 경제발전 외에 환경 보호·민족문화 증진·

좋은 통치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함께 담겨 있다.

부탄의 실험을 세계는 조롱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외형적 생산·소득 개념을 넘어 국민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한 지 오래다. 중국이

성장과 환경의 균형을 강조한 '하세(和諧)사회'를 외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2만달러 시대, 우리 사회 평균적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주승 사화1부장 jsoh@kwangju.co.kr

소득 2만달러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광주일보)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prices.